

□ 차기 정·부총학생회장 기자회견

“학우와 함께하는 총학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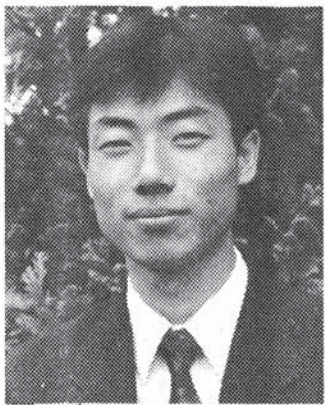
학원자주화·정치투쟁 병행

강의 평가제 도입 교과과정 개편에도 주력

‘92학년도 정·부총학생회장 선거가 오는 11월14일 있을 예정이었으나 윤철수(무역 3)·홍상범(화학 3) 조만 임후보함으로써 무투표 당선 확정되었다. 이에 본사에서는 ‘92학년도 총학생회장 임후보 당선인 윤철수 학우를 만나 앞으로 주력할 학생회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학우들과 인식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워은이 씀]



정: 윤철수



부: 홍상범

▲정·부 총학생회장 당선에 확정됐는데 이에 대한 소감은.

—‘92학년도 총학생회 등록마감 이 끝나고 막상 단독임후보임을 확인하고 보니 내년 학생회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앞섰다.

경선이 됐을 때 보다 학생회 사업 추진이 더 힘들겠다는 압박감과 어깨가 무거워졌을 것이다.

▲92학년도 총학생회에 임후보 하게 된 동기는.

—단대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 임후보하는 것도 우리학교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단독 임후보 역시 처음이다.

학생회사업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학과에 계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보다는 느린 속도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하게 됐다.

내년도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올해 경선 때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총학생회처럼 반복되는 사업진행에서 탈피, 좀더 발전적이고 강화된 학생회를 만들고 싶어 임후보하게 됐다.

▲85학년도 총학생회 부활이후 처음으로 단독임후보하여 무투표 당선자가 됐는데 무투표 당선으로 인해 ‘92학년도 총학생회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경선을 했을 때보다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계획된 대책방안은 모든 선거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면서 ‘정확투론화’를 가질 생각이다. 그리고 경선때보다도 두 배, 세 배 더 학우들을 많이 만날 계획이다.

▲올해 ‘91학년도 총학생회의 사업전반을 정치투쟁과 학원자주화투쟁으로 나눠서 평가해 달라.

—정치투쟁이라는 면에서는 몇몇 소수학우들의 투쟁이 아니라 기층학원단위의 학우들을 끌어올리는 투쟁사업들을 많이 준비한 것 같다.

학원자주화투쟁은 등록금문제와 소비조합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 같다. 그러나 학원자주화에 있어서 경험미숙으로 인해 오는 사전지식이 부족했다.

▲공약을 중심으로 내년 사업 추진방향을 얘기해 달라. 또 중점적인 투쟁방향을.

—내년 사업은 학과학생회의 강화와 학원단위의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가능한

다면 오는 11월과 내년 1월에 학과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간부학이나 간부대회를 가진 계획이다.

총학생회가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학우들과 같이 사업들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형태로 내년 사업들을 벌여나갈 것이다.

내년도에는 총선·대선등 정치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다. 다시말해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으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4천만 민중을 독재의 야수에 굴복을 당하는 것은 기로에 놓여 있다. 우리 청년아라인들이 대대 단결하여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나아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내년도 ‘해방동풍’ 총학생회의 과제라 하겠다.

▲학원자주화투쟁과 관련된 공약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아울러 학교에서 전개하고 있는 발전기금모금운동에 대해 총학생회에서 동참할 생각은 없는지.

—학원자주화분야에서는 등록금투쟁이 가장 큰 것 같다. 태대학의 등록금 투쟁사태를 살펴볼 때 학우들과 같이 공동으로 벌여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각 학과학생회에서 제기된 필요교과목들을 수렴하여 학교측과 협의해 나가겠다.

학교측에서는 지난 3월부터 대학발전기금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은 아직 크게 못해 보았다. 앞으로 잘 논의해 보겠다.

▲당선자의 노선이 NL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는 PD노선과의 융합이 잘되지 않아 ‘제학특위’가 발족되곤 했는데 발전적인 차원에서 제후방안은 없는가.

—어떤 요구가 들어오고 제의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NL과 PD가 융합이 안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배타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우들에 대한 실천과정에서도 상호보완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 같다.

▲총학생회 사업에 대한 학우들의 참여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치투쟁과 일상사업들을 올바르게 배합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학우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 같다.

지금은 잘 파악이 안됐지만 86년·87년에는 학원자주화투쟁으로 많은 학생들이 동참했었다. 지금은 그 당시의 학원자주화투쟁보다 정치적 측면이 부각되어 그렇게 인식되는 것 같다.

▲총학생회 사업들이 정치투쟁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내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학우들이 인식하고 있다. 당선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학원자주화투쟁을 반독점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학원자주화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단순히 복지차원에서 사업이라해서 정치투쟁과 별개로 생각한다면 내년 역시 반독점투쟁에 몰 수 없다고 여겨진다.

▲92학년도 총학생회가 ‘해방동풍’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그 의미는.

—지금까지의 총학생회를 볼 때 자주적 총학생회, 민중민주총학생회, 통일단결 총학생회라는 기치들이 각기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함축한 의미가 아닌

가 있다.

“해방동풍”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학내의 모든 일들을 학우들과 함께 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들이 좀더 올바른 투쟁을 전개해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기치를 내걸었다. 즉, 승리해 대한 믿음을 학우들에게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고 ‘92학년도 총학생회 사업들이 백전백승하는 강한 이미지를 주어야겠다는 의미에서 ‘동풍’이라는 단어를 택하게 되었다.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계획들이 있는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전망들이 가시화됨에 따라 ‘입법적 자투쟁’이라기 보다는 ‘도민생존권 보호’라는 측면으로 투쟁방향을 정해 나갈 것이다.

자정 특별법투쟁이 패배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민생존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부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일부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제주도민을 외면하는 정책들을 저지시켜 나가는데 큰 의의를 두겠다.

1997년도에 자유무역협정인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데 그 다음의 자유무역협정은 제주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특별법 역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추진된다고 판단, 내년도에 올해와 같이 지속적인 특별법투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새학기까지의 남은기간동안 어떤 준비들을 해나갈 것인가.

—내년도에 함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간부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야겠다. 그리고 현총학생회와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들을 구성하고 전체적인 사업정책내용을 수립하면서 이것에 맞추어 특별법투쟁과 등록금투쟁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학우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당부할 게 있다면.

—학생회의 역사가 우리의 현

총학생회 선거공약

학생회 운영문제

-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과학생회 강화 (학년 학생회, 분과, 소모임건설 지원, 학생의 날 ‘연합 학술제’ 개최)
- 생생한 우리들의 의견 바로 뛰어 올리는 학생회 (정기 정책간담회 개최, 산별 모임의 활성화, 학과방 방문의 날 설정)
- 바로 뛰는 간부, 사랑받는 간부 (정기 간부학교 개최, 부서별 간부대회 마련)
- (사월제)의 계승 (4·3학술제, 문화제개최, 4·3유적지 순례 대행진)

학원 자주화 문제

- 대학 자치운영협의회의 건설의 토대 마련 (기성회비 예·결산 공개 및 학생참여 정착화, 학과 교수·학생 협의회 건설 지원)
- 교과과정 개편, 강의 평가제 실시
- 도서관에 법정 기준량에 한하는 도서마련, 도서관 뒷편에 야외휴게실 마련
- 소비조합 운영의 내실화 (제2학생회관 건물배치에 학생 참여 보장)
- 등록금 대책위를 구성하여 전대협, 제총협 차원의 연대 투쟁 전개
- 복지시설 (단체별 식수대 설치, 우천시·하과행사시 학교 버스 운영 제도화)

사회·지역 문제

-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특별법 반대투쟁의 지속화
- 일상적 농민과의 연대투쟁 활성화 (농민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일상적 농민투쟁)
-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 건설로 지속적 반미통일투쟁
-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민주대연합 건설의 선봉적 역할수행

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85학년도 세차례의 총회속에서 어렵게 학생회를 부활시켰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학생회 사업들이 학우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와 사랑속에서 전개되어야 하겠다.

올해 들어서 본임토의라든가

학년단위강화라든가 해서 많은 학우들이 학생회에 편입되어 모든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 학우들 스스로의 관심뿐만 아니라 학생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학생회 사업에 함께 고민해 나아갔으면 한다.

[임상범 기자]

□ 각 단대학생회장 임후보자 공약 점검

복지·취업·지역문제가 주를 이뤄

‘92학년도 학생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임후보자들은 학우들의 관심사와 자신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10월28일을 전후로 해 17개조가 각 단과대 선거관리위원회에 임후보등록을 했다.

이제 임후보자들은 자신들이 내건 공약사항을 학우들에게 이해시키고 학우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분주히 뛰고 있다. 특히 경선을 하게 되는 임후보자들의 선거전은 더욱 치열하다.

각 단과대에 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공약내용을 보면 크게 △학생회강화(단과대, 학과) △인권복지사업(학원자주화투쟁 포함) △지역문제 등으로 집약된다.

특히 운영위조직을 학과학내대표까지 참여시켜 학과학생회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을 각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계획 및 평가 결과, 학생회비 사용내역의 공개등을 통해 일반학우들에게 좀더 가까이 접근하겠다는 것도 그렇다. 이른

바 ‘학내운영위원회’의 강화는 일부 임후보자들이 추진하려는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있다.

후보자들 중에는 공개토론회나 공청회, 학내별 방문을 통한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어 학우들의 지지와 함께 내년도 학생회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의 주장은 1년 사업의 계획과 심의에 이를 학과학내대표까지 포함시킴으로써 해서 실질적인 학우들을 위한 학생회를 건설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사업내용의 계획에서 평가까지를 공개하는 한편, 단과대운영위의 의결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서의 신설과 기관지 발간을 공약사항에 담고 있다.

한편 학과학내대표에게 단과대학의 간부에 대한 감사·소환·처벌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내용도 보인다.

더욱이 후생복지분야는 학우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기도 해 각 후보자들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하고 있다.

후생복지분야에 있어서 임후보자들의 공약은 자판기들의 복지시설의 확충, 취업대책마련, 면학분위기조성을 꾀할 복식실 설치 및 확장, 휴식공간마련등을 비롯하여 자연계 분야의 임후보자들은 실험실습비 사용내역공개를 약속하고 있다.

취업대책부분에서는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취업정보관 설치, 취업설명회 개최, 취업알선 추진을 약속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교수들을 참여시킨 취업대책위원회 구성을 약속하고 있어 대졸자 취업난을 절실히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주위의 얘기다.

한편 어떤 후보들은 교수강의 평가 실시, 교과과정과 교수명임 문제에 참여하겠다는 조심스런 공약도 내세우고 있는 것도 보인다.

지역문제와 관련해서는 농학연대를 위한 각 단위 농민회와의 자매결연과 이를 통한 농민의 활성화를 약속하고 있으며, 제주도 개발 특별법 및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같은 개발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공약도 거의 공통적이다.

단과대 학생회 임후보자들의 공약내용은 그 나름대로의 몇가지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학우들에

게의 접근방법이 대동소이하다. 노선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우들의 관심사는 학우 자신들이 몸소 느끼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임후보자들의 공약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이 얼마나 실현되는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이다. 지금까지 여러 후보자들이 갖가지 공약을 내세워 왔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에 소홀한다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각 후보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원철 기자]

△후보자들은 당선후에 자신들이 제시한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진: 지난 11월4일 인문대 유세장면>

멋과 품위로 선택하는 — 한국타이어

익스프레스 NO.1 요시(YOSI), 그 끝 없는 지평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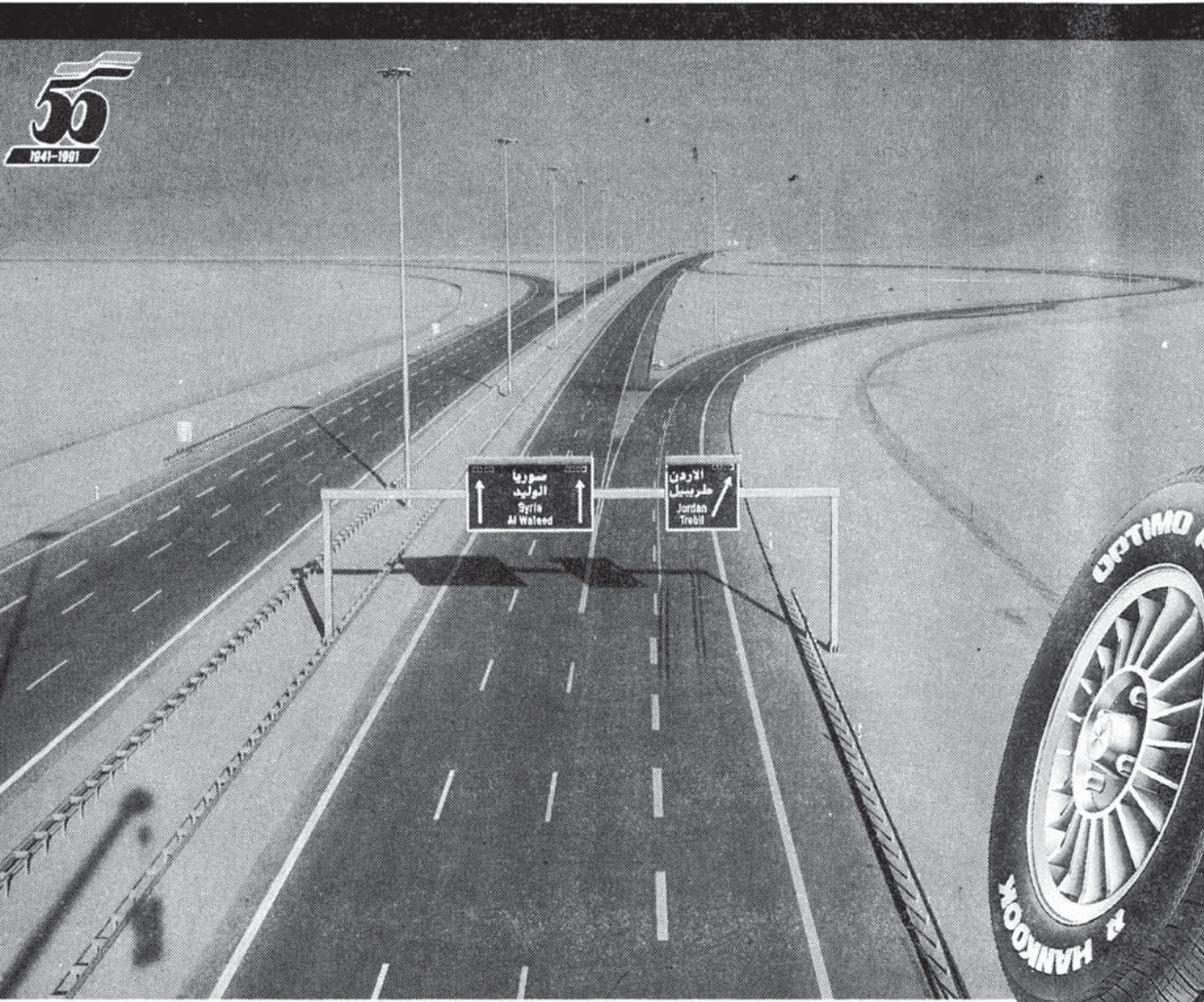
끝없는 데에 펼쳐진 모래 언덕과 돌무더기. 그 무한한 사막의 지평선으로 끝없이 뻗어간 중동의 고속도로 —

이라크의 첫 고속도로인 요시(YOSI)는 루트바에서 요르단 국경과 시리아 국경을 잇는 총 연장 132km의 고속도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진이 닦아 놓은 도로로 ‘익스프레스 No.1’ 이라고도 불리우는 요시고속도로 — 그곳을 우리의 한국타이어가 달리고 있습니다.

150여개국에 수출, 세계의 도로를 달리는 한국타이어는 중동의 사막을 가르는 눈부신 신기루가 되어 오늘도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 타이어 —

한국타이어 TIRE



■ 한국타이어로 달리는 세계의 도로 시리즈 ③ 이라크의 요시 고속도로

□ 제5회 사회발전 연구포럼 요지

중산간 개발계획 추진 즉각 보류 지하수 개발의 폐해부터 명확히 밝혀야

제5회 사회발전연구포럼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심포지엄이 사회발전연구소(소장 강경선·농업경제학과 교수)와 제주도지방자치연구회(회장 송승필) 공동주최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26일 오후 1시 농업중앙제주도지회 4층강당에서 열려,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기했다.

지난 8월30일 공개와 관광개발 일반도 1차산업에 대한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지인 토지소유실태부터 따져보아야 한다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있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이어 새로운 정경에 부각될 제2차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이 포럼에서는 강변기(한양대)교수의 '제주도종합개발의 기본방향'과 주봉규(서울대)교수의 '제주도종합개발의 제문제' 등 5명의 주제발표와 8명의 교수·농민·학생의 지정토론에 방청객들과의 열띤 자유토론이 벌어져 약 6시간30분만에 끝났다.

이날 있었던 주제발표·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강변기(한양대교수)는(제주도종합개발의 기본방향) 주민들은 제주개발이 제주도의 자연적 환경과 경제 환경(1차산업기반, 소규모토지, 소규모주택, 산지 개발계획 수립, 주변의 해양수산 자원의 개발 등의 지표가 제시된다 하겠다.

▲주봉규(서울대 교수)는(제주도종합개발의 제문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농업발전정책·영농형태 설정, 경제작물·과수 및 축산등의 생산단지 조성, 농업생산기반 사업의 확충, 농업소득 내실화방안 개발, 생산단지의 생산과 유통방안 및 가공·저장 등의 설치계획, 구상, 경제작물·과수 및 축산에 연관된 산지 및 목장유지자원화계획 수립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수산산업에 관한 수급의 전방면적,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계획, 예산, 자연적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검토하여 지역별 농업발전정책 설정시도, 농수산산업 유통체계 합리화의 계획, 농가소득에 관한 계획수립, 산지 개발계획 수립, 주변의 해양수산 자원의 개발 등의 지표가 제시된다 하겠다.

▲문대관(제주신문 상임논설위원)은(제주도종합개발계획중 개발방식의 문제) 2차종합개발계획은 개발방향을 추가한 종합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개발의 실질적 내용을 토지이용의 개발계획에 입입한 것은 정제·관계의 고위층을 통한 토지이용·개발사업자의 입역에 국한되고 되고 심지어 부패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개발방식은 제주 전 지역에 걸쳐 소단위 개발을 하여 균형개발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연과파괴를 전연에 확산시키고 제주도 전역 특히 중산간지역에 대한 개발이론을 미리 본래·독점시켜 사회적 불균형과 폐쇄성을 강화시키는 개발이론 사전 본래의 편견이 수 있다. 아울러 지가상승과 사전계획·예측가능성을 막고 이익분배의 공정정정을 막는 폐쇄화·방식일 수도 있으므로 지역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영리적 사기업의 기획에 맡기는 개발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영희(성산읍 성산리장)는(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전제)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관광산업에 치중하여 1차산업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시행착오를 범했는데 이에 대한 대안제시 조차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차 종합개발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중앙통제형의 개발방식은 외지인의 탐욕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이라고 하면 국가가 국민으로 부터 무엇을 바랄한다는 의식이 박혀있어 거부감부터 드는 것 같다.

사법전문가로서 특별법 제정이 직접 관여할 입장은 아니지만 주위의 권유도 있고 법학도로서의 보람도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됐다.

여기서는 특별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문제를 몇가지 제기해 봤다.

첫째, 입법과정의 문제로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내 각 직능단체 즉, 도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도민에게서 분리된 것도 아니고 도민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옮겨오는 것이 특별법이 만들어질 주요요인이기다. 이와 개발할 것이라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대연(사회학과)교수는(특별법을 무엇이 근거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4가지 정도의 판단기준을 말해 보겠다.) 첫째,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문제이다. 60~70년대의 정부 기본정책은 산업화, 국가안보, 국민총화였는데 이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소극적 개입이나 한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신제적인 통합 메커니즘 개발 등에 주력하고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1960년대부터의 산업화

다. 따라서 지역별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편중된 대기업 자원을 각 지역의 정책지원자금으로 전용하는 노력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담보 후지원의 정책을 선지급 후담보로 전환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해야 지역민의 개발참여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윤정수(해양학과 교수)는(제주도종합개발과 지하수 보전대책) 제주도 지하수의 개발여부는 20여년이 지난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개발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하수의 자연수위 하강, 해안지역의 해수침투, 지하수의 수질오염, 과다한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 지질 지형의 약화로 인한 지질재해 우려 등이 그것인데, 따라서 지하수 자원의 개발에 따라 보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유정수(환경영양학과 교수)는(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분석)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분석은 계획의 집행·목표지 재해석에 달린 문제이다. 주제발표에서는 3차산업에 의한 1차산업의 발전방향을 간과하고 있는데, 실제대비는 낮지만 3차 관광산업의 지표적 방향이 없었다면 농촌경제·부가가치 증대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관광산업의 가망성에 대해서는 인정해 봐야 한다.

개발방식에 있어서 개발허가방식과 지구지정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계획의 총괄적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종합개발방식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행정축소와 민영화와 중앙정부의 하향의 흐름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은 운영의 묘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사례에 의존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만 방식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현종남(농업경제학과 교수)는(중산간지역 보존이유에 대한 의견) 보존이란, 지하수개발의 폐해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에는 개발계획 추진을 보류해야 하



○제5회 사회발전 연구포럼'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심포지엄이 지난 10월26일 농업중앙 제주도지회에서 열렸다.

고 있다. 1차산업 육성의 문제가 제외되고 있다.

지자체의 실시로 제주도가 '특정지역'에서 제2차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2차종합개발계획에 그러한 특정지역이라는 것이 제외됐을 때 국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것의 활용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겠다.

▲강경선(농업경제학과 교수)는(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분석)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분석은 계획의 집행·목표지 재해석에 달린 문제이다. 주제발표에서는 3차산업에 의한 1차산업의 발전방향을 간과하고 있는데, 실제대비는 낮지만 3차 관광산업의 지표적 방향이 없었다면 농촌경제·부가가치 증대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관광산업의 가망성에 대해서는 인정해 봐야 한다.

개발방식에 있어서 개발허가방식과 지구지정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계획의 총괄적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종합개발방식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행정축소와 민영화와 중앙정부의 하향의 흐름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은 운영의 묘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사례에 의존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만 방식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현종남(농업경제학과 교수)는(중산간지역 보존이유에 대한 의견) 보존이란, 지하수개발의 폐해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에는 개발계획 추진을 보류해야 하

고 있다. 1차산업 육성의 문제가 제외되고 있다.

지자체의 실시로 제주도가 '특정지역'에서 제2차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2차종합개발계획에 그러한 특정지역이라는 것이 제외됐을 때 국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것의 활용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겠다.

▲강경선(농업경제학과 교수)는(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분석)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분석은 계획의 집행·목표지 재해석에 달린 문제이다. 주제발표에서는 3차산업에 의한 1차산업의 발전방향을 간과하고 있는데, 실제대비는 낮지만 3차 관광산업의 지표적 방향이 없었다면 농촌경제·부가가치 증대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관광산업의 가망성에 대해서는 인정해 봐야 한다.

개발방식에 있어서 개발허가방식과 지구지정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계획의 총괄적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종합개발방식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행정축소와 민영화와 중앙정부의 하향의 흐름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은 운영의 묘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사례에 의존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만 방식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현종남(농업경제학과 교수)는(중산간지역 보존이유에 대한 의견) 보존이란, 지하수개발의 폐해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에는 개발계획 추진을 보류해야 하

□ Pax Chejudona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5일과 26일에 제주국제회의장으로 "평화와 번영의 제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됐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보자는 강한 의지가 담겨진 국제적인 세미나였던 것이다.

필자는 칸트(Kant)의 「永久平和論」을 읽은 후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온 터인데, 勿失好機 이틀동안 始終 同세미나에 참석하여 왔다. 또한 필자는 同세미나의 대의원(denouement)이 내려지기 직전에 同세미나에 대한 요약 내지 寸評을 할수 있는榮光을 갖기도 했다.

아무튼 同세미나는 民間機構인 제주국제회의회에서 개최되었다는 점, 그리고 제주국제회의의 멤버는 대개가 제주도 출신으로 육지부 내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碩學들과 도내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화의 섬"에 관한 구상이 濟州産이라는 점, 同세미나에 미국, 소련, 중국, 호주 등지에서 외국 석학들이 참석하여 眞實한 국제적인 세미나라는 점, 또한 시사각각으로 대변역(maelstrom)을 일으키고 있는 국제정세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데 좋은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참석했던 외국 석학들의 공통 의견) 그리고 제주도의 문화가 평화주의(Peace-oriented)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행히도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되는데 손색이 없는 섬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同세미나에서는 여러 가지

次元에서 高見와 眞見들이 簇出하였거니와 그것들을 여기에서 枚擧하기란 벅찬 일이다. 여기서는 "평화의 섬"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提案되었던 것들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군사관계시설(핵무기 포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평화관계 정상회담 유치. △평화연구센터 또는 평화교육센터설치 △東北亞經濟圈에 對한 對平화협력관 설치. △평화인문과학연구소 설치. △평화관광단지. △道議會 市 君議會에서 平和決議를 선언할 것. △제주도평화의 날을 제정할 것 △외국에 교육의 강화 등 學術 界인들이 云論되었다. 平和實의 制定도 所望스럽다.

필자는 同세미나에 참석한 후에도 "평화의 섬"에 관하여 좀더 생각해 봤다. 그 생각은 이렇다. 평화의 類型에 관하여 살펴보면 Pax Romana가 있었고 Pax Americana가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에는 공통점이 있어보인다. 그 공통점이란 세계적 거시적 그리고 Power의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무슨 事物을 接近하는데 있어서 巨視의 接近뿐만 아니라 微視의 接近도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平和를 추구하는 데 微視의 接近은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국가단위 또는 지역단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바 그 視角을 우리 나라로 돌릴 때 이른바 Pax Koreana를 想定해 볼 수 있겠다. 또한 Pax Koreana의 特性으로는 國家의 微視의 그리고 文化의 언어 할 것이다. 그런데 Pax Koreana의 paradigm을 어디

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찾아볼 필요 없이 제주도에서 찾아야 한다. 즉 Pax Chejudona에서 말이다.

본시 제주도의 文化는 平和志向의(Peace-Oriented)이라 할 수 있다.

三無精神이 그렇고 犯罪없는 마을의 모습이 그렇다. 반면에 제주도에는 4·3사건이란 비극이 있었다.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never again)라는 제주도민들의 다짐은 비장하지만 좀 드물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가멸하여감에 따라서 더욱더 평화에 대한 希求는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Pax Chejudona의 개념은 그 內包가 多樣性과 關聯性을 띠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所著한 것으로 되어갈 전망이다. 때문에 Pax chejudona에 대한 時의 多學問的 巨·微視의 들의 여러 가지 接近方法을 통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국제회의의 회가 개최했던 국제학술회의는 Pax Chejudona를 淸查하는 데 總論의 整理 作業을 수행했다고 보아진다.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평화의 섬을 구체화시키는 各論의 課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손인석(제주도 과학연구소)은(지하수 개발현황에 대해 수자원조사, 농어촌개발조사, 동력자원조사 등 여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하수공수보고 같은 것들이 각 기관마다 상이하다. 이것은 국력의 낭비와도 연관되는 데 이러한 기초적 조사가 상이하고 미흡한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수 보존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리라 본다.

▲김승철(변호사)은(개발계획이 주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올바른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국가의 공공부분 투자가 대한 자금운영계획이 마련돼야 하며 개발에 있어질 수 있는 복지의 혜택이 반드시 명기돼 있어야 할 것이다.

이 포럼에서는 개발방식·유형 등의 여러 문제가 제기됐는데 관광산업 못지않게 1차산업의 육성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점, 환경보존의 당위성, 주민주체의 점진적 제주개발이 필요하다는 비록의 공유와 함께 중산간 보존문제, 제주개발의 정체성, 개발방식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고희갑 기자】



한창영 행정학과 교수

□ 특별법문제 민주당 조사단과 본교교수와의 간담회 요지

민주당-‘특별법 저지투쟁’ 동참 약속

민주당 제주도개발 특별법 문제 현지조사단(단장 박영숙 최고위원)이 지난 10월28일 내도, 29일 우리학교를 방문해 교수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당초 오후 1시로 계획됐으나 민주당 조사조사단이 예정보다 늦게 학교에 도착해 교문앞에서 12시30분부터 연좌시위를 벌인 뒤 1백여명의 학우들과 함께 본관대학의 일각이 걸려 들어와 약 1시간이 지연된 2시부터 약 1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이날 면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영숙 최고위원=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에 관련해 도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28일 제주에 도착해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범도민회, 도당국,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민들은 특별법에 대한 여러고충을 전로적인 견해를 듣고 있다.

▲신형철(사회학과)교수=제주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이에 맞는 제도적 장치인 제주도개발 임시조치법을 만들고 국회입법화를 시도했으나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충돌했다.

제주도개발은 중앙집권적인 논리로 총괄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맞는 제주도개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다.

법이라고 하면 국가가 국민으로 부터 무엇을 바랄한다는 의식이 박혀있어 거부감부터 드는 것 같다.

사법전문가로서 특별법 제정이 직접 관여할 입장은 아니지만 주위의 권유도 있고 법학도로서의 보람도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됐다.

여기서는 특별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문제를 몇가지 제기해 봤다.

첫째, 입법과정의 문제로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내 각 직능단체 즉, 도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도민에게서 분리된 것도 아니고 도민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옮겨오는 것이 특별법이 만들어질 주요요인이기다. 이와 개발할 것이라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대연(사회학과)교수는(특별법을 무엇이 근거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4가지 정도의 판단기준을 말해 보겠다.) 첫째,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문제이다. 60~70년대의 정부 기본정책은 산업화, 국가안보, 국민총화였는데 이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소극적 개입이나 한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신제적인 통합 메커니즘 개발 등에 주력하고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1960년대부터의 산업화

정적으로 인한 발전의 결과로 우리는 절대적 빈곤에서는 해방됐으나 상대적 빈곤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됐다. 성장의 속도가 가파른 변화보다 앞서가지 않으면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셋째, 지역발전의 기본방향 설정 문제인데, 지역주민의 이익과 국가이익간의 갈등에서 국가적이익보다는 지역주민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

네째, 제1차 종합개발계획의 결과 개발이익이 환수가 기대이 하로 내려가고 산업과 개방사회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제주도의 개발방향을 설정해 보겠다. 정부의 역할은 과다계획을 피하고 관리자, 후견자의 입장이 돼야하고 대규모 자본을 중심으로 한 국가이익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통과 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 시간 1조에 설정된 목표는 2조이상의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제주개발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국가 이익보다는 주민의 이익을 중시시키며 급진적 시한부적 개발보다는 지방정부의 정책지원에서 점진적 지속적 개발이 돼야 한다.

은 현행법의 문제점 파악조차 없고 제주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도 없이 제기된 것이다.

특별법은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신속·정확하게 개발하기 위한 법이다.

제주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관광지이므로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해는 제주도 개발의 속도도 빠르며, 더 이상 개발 속도를 가속화 하는 것은 무리이다. 관광개발은 점진적으로 해야지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역효과를 초래한다.

무분별한 중산간 개발로 제주도민의 식수원인 지하수가 오염·고갈되고 있다.

관광개발의 한계, 수용의 한계를 생각하고 적절한 속도로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은 오늘날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지난 10월29일 우리학교를 방문한 민주당 조사단(단장 박영숙)이 제주도개발특별법 문제와 관련해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행위 지역제정한다.

도시안은 도시계획법이 적용되고 도시 바깥은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특별법은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 제주도의 경우 중산간 지역이 개발대상이라는 것이다.

중산간 땅에서 최소한 60% 이상이 외지인 소유이다.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행위 제한을 배제하는 경우 개발의 주체는 땅가진 사람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이 특별법대로라면 도시사이에 막대한 힘을 부여, 외제 처리로 고통 받고 있다.

개발의 논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사회에서 민방의 관선지사인 제주도 도시개발이 개발을 이끌 수 있겠는가. 계층간의 격차문제, 개발문제, 땅문제 우리시대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다.

▲윤정수(해양학과)교수는(제주도 지하수 개발은 1970년대부터 이뤄져 20년 밖에 안됐지만 고갈현상 뿐만 아니라 해안가에서는 6km까지 해수가 침투되고 있다.

▲한석지(사회교육과)교수는(6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주개발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자본과 권력에 의해 방황지향적이고 주요산업이 선택됐었다.

▲한석지(사회교육과)교수는(6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주개발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자본과 권력에 의해 방황지향적이고 주요산업이 선택됐었다.

▲한석지(사회교육과)교수는(6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주개발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자본과 권력에 의해 방황지향적이고 주요산업이 선택됐었다.

▲한석지(사회교육과)교수는(6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주개발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자본과 권력에 의해 방황지향적이고 주요산업이 선택됐었다.

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은 현실에서 제주도민은 지역민들을 위한 법을 원하고 있다. 민주당의원들께서는 일부 지식인의 의견 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보았으면 한다.

▲이정규(사학과)교수는(특별법의 목적 1조에 보면 제주도의 각종 천연자원을 보존 이 용해서 국제적인 관광지를 만든다고 돼 있다.

우리 제주도는 물론 자연경관이 뛰어나지만 지나치게 천연자원에만 중점을 뒀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인문자원이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파괴됐다.

국제적인 관광지인 발리나 오가나와 등에서는 인문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서귀포 신기사지, 중문관광단지 등은 사전에 인문자원 조사도 없이 진행됐다.

건설부에서는 개발만 앞세워 문화유산의 훼손만을 일삼고 보존, 이용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박영숙 최고위원=여러 교수의 의견 잘 들었고 주민들, 범도민회측, 도당국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특별법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당론화시키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한편, 민주당 현지 조사단은 지난 10월 28·29일 양일간의 현지 조사 결과를 다듬고 같이 발표했다.

특별법 제정은 제주도민들의 절대다수가 찬성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 신민자당이 만일 도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런 정치국회 회기중에 강행하려하고자 할 경우 민주당은 당력을 기울여 이를 저지할 것을 건의한다. 특별법 문제의 신중한 검토와 결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공청회를 여당측이 요청하고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 【김미진기자】

신임 교무·학생처장 인터뷰

교과과정 개편시 교양교과목 대폭 늘려야



교무처장

고남욱 교수 경제학과

지난 10월28일 신임 교무처장 고남욱(경제학과)교수를 만나 앞으로 교무행정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 2학기에 폐강된 교과목만 해도 무려 1백36개나 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교과과정은 '89학년도에 개편된, 그 이전의 교과과정보다 20%이상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한 후 나타나는 자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방침을 갖는다고 보아도 다음 교과과정개편시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더욱 향상된 교과과정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 다시말해 다음 교과과정개편시에는 교수 중심적인 교과편성에서 벗어나 좀더 학생들의 구지목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89학년도에 작성된 교과과정이 내년에는 개편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대의 조류에 맞는 교양교과목이 타대학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대학은 4년마다 교과과정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개편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과신설 등으로 교과과정개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개편을 하고 있다. 앞으로 교과과정 개편시에는 그간의 학문발전추세를 신중히 검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교양교과목들은 종전의 편성과는 달리 학문영역간에 균형있는 교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교양교과목을 학문영역별로 분류하여 학생들이 폭넓은 교양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다.

△강의시간표가 대부분 교수들의 편의위주로 짜여져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선택을 할 수 없다고 불평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가.

—교양분야의 강의시간표는 교무처(수업과)에서 편성하고 전공교과는 각 학과에서 편성하고 있다. 학기 초마다 일정한 수업시간표 편성기준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각 대학에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수업시간표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기준의 그룹이나 교수들의 편의를 위주로 수업시간표를 편성하지는 않고 있다.

△학칙에 의하면 우리대학에서도 조기졸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특별시험학점취득제나 계절학기등을 통해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해 조기졸업요건을 갖춘 자로서 평점평균이 4.0이상일 경우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계절학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학점특별취득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학기만 휴학하고 역학기 복학이 가능한지.

—학점부족등 교과이수율을 위하여 부득히 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당시의 학기에 관계없이 역학기 복학을 허가하고 있으나 그 외의 학생이 한 학기만 휴학하고 역학기에 복학한다는 것은 교과과정 이수상 불가능하다.

△속주부 대학에서는 C학점까지도 재이수가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D학점까지 재이수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데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이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가.

—'88학년도에 학칙개정을 학기전까지는 D+의 성적까지 재이수가 가능했으나 '89학년도 2학기부터는 F등급 교과목만 재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이 개정되어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강좌개설을 할 수 있는 강의실 부족 등이 해소되고 부작용에 대한 해소방안을 고려한 후 교과과정 이수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각종 취업정보 데이터뱅크화 시급



학생처장

문두길 교수 원예학과

“단 하루를 하더라도 많은 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펴려하는 신임 학생처장(문두길교수 원예학과)을 지난 10월24일 학생처장실에서 만났다.

△학원침탈이나 고구려학우 추락사건 당시 학교측에서는 여기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정부의 학원안정화대책방안의 타당성과 그 진의에 대해.

—내가 알고로는 총·학생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학원안정을 위해 이런저런 상황은 개선해야 되지 않는다는 권고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것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면가 시행해야 한다는 지시는 없었다고 실무진들로부터 들었다.

△학원자율화과정을 뒤돌아보고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자율화 시대이므로 학생·교수·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적된 문제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지 외부에서 지시한다고 그대로 따라하는 때는 이미 지나갔다고 본다.

△그런데 보다는 좀 덜하지만 학생 회관 등 교내 요소요소에서 동아리 문화파들이 두드러지는 각종 종물소리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화시킬 대책은 없는지.

—그것들은 대학문화의 일부분이다. 하나 공부를 하고 있는 다른 학우들에게 방해가 되어서 안 된다. 앞으로 그러한 동아리의 대표학생들과 협의하여 장소를 옮기거나 연습시간을 방과후에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우리학교에 취업대책위원회가 있기는 있는가? 있다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턴사원제 실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취업대책위는 본부에 총장과 처·국·실장으로 구성돼 있고, 각 단과대학에는 학과, 교수·학생과장, 서무과장으로 꾸려져 있다.

좁은 공간에 인원이 많은 학생들의 취업문제를 넓히기 위해 11월초순경에 기업체와 관련이 있는 각 대학의 교수들을 선발해서 기업체를 순방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취업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컴퓨터에 입력시켜 여러가지 취업정보에 대한 데이터 뱅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취업대책은 학생처만이 세우는 게 아니라 각 학과와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졸업예정자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관심사부터 실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

△서점·복사실의 직영화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4학년도에 서점을 직영화 하자고 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자운영을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금 다른 국립대학에서도 서점을 직영화하는 곳은 없으며 말처럼 흑자운영을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우리학교에 복사실이 열려 있는데 복사기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업자가 운영할 때보다도 기계수리비가 많이 지출된다.

직영했을 때 현재보다 서비스가 좋아 진다거나 흑자운영이 된다면 직영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기에 지금 직영화 할 생각은 없다.

【纂】

오는 13일 정책설명회 개최

차기 총학생회장 '무투표당선 부작용 줄이기 위해' 이영심 학우도 차기 여학 회장에 무투표당선

각 자치기구의 선거등록이 지난 10월31일까지 모두 마감된 가운데 총학생회에 단독 입후보한 정·이영심(국문3)·부·이희정(수교2) 학우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고, 경선을 치르게 되는 인문대 등 5개 자치기구의 입후보자들은 선거마지막까지 치열한 유세전을 벌이고 있다.

또한 11월4일 오후 5시 등 록을 마감한 총대원의회 정·부직선선거는 김재성(정, 법3)·오성택(부, 교교3) 학우조가 단독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자가 확정됐다.

3개조가 출마한 농과대와 2개조가 출마한 인문대들은 아침마다 선전 홍보전을 벌이면서 각각의 정책과 공약, 공약 및 정책을 설명하는 등 선거전이 치열하다.

경선을 실시하는 각 단과대의 투표일은 다음과 같다.

△인문대=11월6일(8110강의실) △법정대=11월7일(2108강의실) △경상대=11월6일 △농과대=11월6일 △해양학과=11월8일 △아간강학부=11월6일.

아울러 85년 총학생회 부활이후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

이 확정된 사법대, 자연대, 공과대, 동원, 여학 등의 당선자들도 무투표 당선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들 당선자들은 친박운영 및 학우들 방문과 함께 11월 6일을 전후로 정책설명회를 갖고 학우들에게 자치기구 사업에 대한 협조를 호소할 계획에 있다.

여학회장 당선자인 이영심 조는 11월7일과 11일 두차례 유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 이외에 무투표 당선



교수동정

△교류부(해양학과)교수=지난 11월1일부터 2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해양학회 제91년도 추계연구발표회에 참석해 "아열대 산호초 주변의 생물 플랑크톤 분포와 현존량"에 대한 논문발표, 2일 있었던 정기총회에서 한국해양학회 이사에 피선.

△박익찬(해양학과)교수=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해양학회 제91년도 추계연구발표회에 참석해 "대만산호초의 기원에 대한 수치모델링"에 대한 논문발표.

△오윤근(해양환경공학과)교수=대한 환경공학회와 한국 수질보전학회 이사인 오교수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해양학회 제91년 정기총회에서 한국해양학회 이사로 피선.

△김순선(농화학과 교수)도서관장=오는 11월8일부터 3일간 전북대학교 도서관에서 열리는 '제2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장협의회'에 참석.

△고정삼(농화학과)교수=지난 11월1일부터 3일간 서울대학교 농화학과에서 열린 '한국 농화학회 추계 학술발표회'에 참석.

△유정걸(농화학과)교수=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서울 원자력 연구소에서 열린 '폐기물 처리와 동위원소 안정성에 관한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 보수교육'에 참석.

△유창훈(식품영양학과)교수=지난 11월2일 동국대에서 열린 '제60차 한국 농화학회 학술발표회'에 참석.

△김철수(수학과)교수=지난 11월 1일 인하대에서 열린 '91한국 통계학회 추계 학술논문 발표회'에 참석.

△현진호(수학교육과)교수=지난 11월 1일자로 사법대 과학교육연구소장에 임명됨.

학과소식

사교'Civics제'

△사회과교육학회(회장 김경희 3)추최 '제1회 CIVICS제'가 지난 11월2일 오후 3시 3323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정치분과="사회과 교과에서의 정치교육" △경제분과="사회과 교과에서의 경제교육" △사리분과="사회과 교과에서의 사리교육" △사회분과="사회과 교과에서의 사회, 문화교육" △역사분과="사회과 교과에서의 역사교육" 등의 분과 발표회와 '동문·재학생의 어우러짐의 마당'이 펼쳐졌다.

△출산학회(회장 김삼현 3)추최 '제24회 출산의 날'이 지난 11월2일 4130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이날 학술제에는 김문철 부교수의 '뉴질랜드의 초치와 연구사업', 김태환박사(제주시험장장)의 '제주도 축산업과 시험사업'등을 주제로한 강연이 있었다.

이날 강연이 끝난후 축산학과 동물들과 재학생간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도 열렸다.

△음악학과정기연주회 12월 문예회관 대극장서

△음악학과정기 '제8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12일 오후 7시 문예회관대극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음악학과는 지난 11월1일에는 2등 증감당에서 '제8회 졸업연주회'를 연 바 있다.

초청강연

"태평양 시대와..." James shon교수초청

△James shon교수(하와이주 하와이 보건위원회)의 "태평양 시대와 학술 문화교류"에 관한 강연이 지난 10월23일 오후 2시30분 영어교육과(학과장 우상근 조교수)추최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323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제주양반의...' 농학과학생회 주최

△제주양반의 산업화에 대한 방한제시라는 주제의 강연조제 (69년 농학과를 제2학년생) 초청강연이 지난 11월1일 오후 2시 농학과 학생회(회장 황기봉 3)추최로 4312강의실에서 있었다.

공연·전시

'한라산'마당극 '개발바람 오름너머'

△놀이마 '한라산' 열번째 마당극 '제5회 우리문화한마당'

△공연제목=개발바람 오름너머

△장소=제주 YMCA 3층 강당

△시간=11월9일 오후 4시 30분, 7시, 11월10일 오후 4시, 7시, 11월11일 오후 7시.

아라뿔 산수회 '수석전' 오는 6일부터 4일간

△교직원 직장동호회 모임인 아라뿔 산수회(회장 양중해교수 국어교육과)추최 '제10회 수석전'이 오는 11월 6일부터 11월9일까지 시내 난석대(농협도지회 남쪽)에서 열린다.

호우회 '돼지들의 산책' 7,8일 문예회관 소극장서

△호우회(회장 이승철 통신폭 2)의 네번째 정기공연 '돼지들의 산책'

△원작=김용락
△기획=손경국
△연출·각색=이창훈
△인사 및 장소=11월7일 3시·6시(2등 증감당), 11월8일 4시·7시(문예회관 소극장).

동아리 소식

△사자영어연구회 주최 공개강좌 'Let the Game begin'이 지난 11월1일 오후 5시 3323강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강좌에서는 이상아(식품영양 3), 김의성(가정관리 1), 양익준(기공공 1) 학우가 연사를 맡았다.

게시판

오성진 학우 연행돼 지난 10월19일

△집사영어연구회의 혐의로 수배중이던 '90학년도 법정대 학생회장 오성진(행정 4) 학우가 지난 10월19일 오전 제주로원 앞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오학우는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던 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디학과학우 3명 임상 제22회 전국대학미전서

△산디디자인학과 소현경(4), 하은숙(4), 김현애(4) 학우들 3명이 중앙대학교 주최 '제22회 전국대학미전'의 시각디자인, 환경 및 제품디자인, 공예디자인 부문에서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세 학우의 작품은 10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대화장소인 경기도 문화예술관에 전시됐다.

금요영화 감상회 11월 8일="인터걸" 11월 15일="마루타" 11월 22일="문스트러" 29일 재출연 시리츠 제3탄 시티라이트(City Light)

△시간=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여학연구소(사법대 2층)

금요영화 감상회 11월 8일="인터걸" 11월 15일="마루타" 11월 22일="문스트러" 29일 재출연 시리츠 제3탄 시티라이트(City Light)

△시간=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여학연구소(사법대 2층)

농협합창30주년 기념 저축 상품 안내

一石三鳥 예금

■수익성 정기예금의 월이자 자동적금에 복리식으로 연결, 최고의 수익률 보장, 37개월 44.22%(월 14.34%)

■보장성 재해 사고시 정기예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

■편리성 "하나로 종합통장" 하나로 모든 기능 자동처리

●정기예금 이자를 적금원금으로 매달 자동이체

●가입과 동시에 소액자금(20만원) 자동대출

●각종 예금의 이자, 월급여, 연금, 배당금 등의 자동입금

●대출원리금, 공제료 및 전기료,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의 자동납부

※농협특별저축상품-내고향저금, 꿈나무저금, 이자보호예금, 근로자장기저축

취업업무

■은행업무·공제(보험 업무)·지도사업 장학사업·국고 및 각종 공과금 수납

(타은행 송금) 현금자동지급기·수입인지 무인판매대 설치



편리한 은행 여러분의 농협
제주대학교 출장소
☎ 56-1119, 54-2381

◇ 취업·부직희망자를 찾습니다 ◇

직종	인원	업체	부직/취업	보수	시간·자격
관리직	남 1	대명인쇄사	계속취업	월35~40만원	오전9~오후6, 가족수당+생일축하금, 상여금200%
경리	여 1	제주 택시노조	계속취업	월25만원 (일당1만원)	오전9~오후5, 상여금300%
인테리어 디자인관련	여 1	신제주미진내 장진축화점	계속취업	월35만원	오전8시30분~오후6시 (미술학과·산업디자인학과)
Bit컴퓨터강사	여 1명	Bit컴퓨터	계속취업	월32만원	오전10시~오후8시30분(6개월정기 이수학생 4학년 여)
도서취급 (운전원)	남 1명	학동도서	계속취업	월50만원	운전면허 1종 소지자
매장근무	남 여 각1명	엘칸토	계속취업	남(월)50만원 여(월)36~40만원	정기승급제, 결혼차(전세자금), 교통비, 식비지급
연구직	남 1	정통종묘	계속취업	월50만원	오전9시~오후6시(농화학, 원예, 생물학과)
토산품매점	여 1	자연사박물관	계속취업	월평균50만원	(야간학생)여
경리	여 1	정성상사	계속취업	본인과 결정	오전9시~오후5시
지도교사	여 2	아이베크	계속취업	월35만원	오전8시~오후6시(교원인수자)
학원강사	여 1	수제색채학원	계속취업	월30만원	오전9시~오후7시(종식제)
서빙	여 1명	원월드너츠	부직계속가능	월25만원	오전9시~오후6시
의류판매보조	여10	신성백화점	부직계속가능	시간당1500원	10월21일 이후(용모단정한 여학생)
배달보조	남 1	동아식육	지급~92년4월	월35만원	오전8시~오후6시
영업보조	10	아폴로제주점	부직계속가능	상당후 결정	
회원모집	제한없음	제주VIP	3개월	한전당17000원 30건 이상시 10만원 추가	
타라LPG 가스충전	남 1	타라LPG 가스충전	계속가능	월35만원이상	격일근무

남·여 아르바이트생모집

커피문화의 신선한 충격
Esperer coffee shop제주에 상륙
엄선된 원두와 뛰어난 향

커피의 세대교체 선언
Esperer제주점 탄생
이태리, 미국, 브라질, 유럽의 커피맛을 이제 제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커피의 품격주의를 선언한 Esperer 이 가을
Esperer와 당신과의 만남은 또 하나의 자연입니다.

새로운 커피문화를 창조하는



☎ 58-0053~4

